

# 불량식재료 등 어린이집 급식비리 여전

### 최근 5년간 527건 적발돼 494건 시정 등 행정처분 김원이 의원 “해마다 되풀이...당국 노력·관심 필요”

불량 식재료 사용과 부실급식 등 어린이집의 급식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서 불량식재료 사용과 부실급식 제공, 급식단가 및 위생문제 등으로 527건

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 신고가 접수돼 669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급식비리 유형으로는 불량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

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을 차지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46.9%)과 가정 어린이집(43.3%)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7.0%)과 법인 어린이집(2.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69건, 서울 133건, 인천 26건 등 수도권에서 빈번했으며, 광주 7건, 전남은 9건 발생했다. 이러한 급식비리로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총 494건에 달했다. 시정명령(390건, 78.9%),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운영정지(12건, 2.4%), 자격정지(8건, 1.6%) 등도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3년 내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국가산단서 60대 근로자 쓰러져 4시간만에 숨져

13일 오전 9시 52분께 전남 광양국가산단 내 A사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사에 따르면 청소용역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B(62)씨는 이날 오전 작업 투입 전 안전관련회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4시간여만인 오후 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 여수 거문도 해상서 화물선과 어선 충돌...인명피해 없어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2400t급 화물선과 4.99t급 어선이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7해리(약13km) 해상에서 팔아우 선적 화물선 A호(2412t·승선원 13명)와 여수산적 연안복합어선 B호(4.99t·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을 사고 현장으로 보냈다. 해경 확인 결과 두 선박 모두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선원은 없었으며, 상호 충돌로 화물선 A호는 선수 좌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어선 B호는 좌현 선수 외판이 파손됐다. 침수 파공 등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두 배의 두 선장 및 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태와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4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 건넨 혐의(사기)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전남 담양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215만 원을 건넬바라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교통비를 제외한 1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2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경남 양산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광주 평생학습센터 신축현장 불...인명피해 없어

광주 동구가 건립 중인 평생학습 복합센터 신축현장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2일 광주 동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동구 서석동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4층 규모)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축물 4층 내부와 천장 단열재 등이 타거나 그을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평생학습 복합센터는 동구가 지난 4월부터 옛 서남동 주민센터 자리에 연면적 919㎡ 규모로 짓고 있는 시설이다. 이달 중 완공을 앞둔 해당 센터에는 음악·체육·요리 관련 주민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광주·전남 혈액보관소 내진설비 미구축...지진 등 재난 취약

### 권철승 “전국 15개 중 9곳 미설치...내진설비 구축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보관창고 내진설비가 되지 않아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내진, 방호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혈액원 혈액 보관창고 중 9곳(60%)이 내진 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광주전남혈액원은 방호시설만 구

축됐을 뿐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한 내진 설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진설비가 구축된 혈액원은 서울동부혈액원·울산혈액원·경기혈액원·충북혈액원·전북혈액원·제주혈액원 등 6개 뿐이다. 권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진 상황 등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관리 훈련을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혈액창고 대다수가 내진 설비가 되어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며 “국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혈액 보관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전국 혈액창고의 내진 설비 마련이 필요

정승호기자

## 광주지법 가압류 해제 실수...국감서 권위적 행태 지적

### 6달 넘게 부동산 가압류 해제 누락

광주지법 공무원이 가압류 해제를 신청받고도 수개월 동안 처리를 누락한 뒤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압류 해제 누락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지법 실무관 A씨는 전산으로 접수된 가압류 해제

신청 건을 누락했다. 9일 만인 올해 1월 2일 광주고법 또 부서로 발령 났다. A씨의 업무상 실수로 건물 관리인 B씨가 6개월 이상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 법원은 B씨 측 변호인의 연락을 받고 7월 9일 가압류를 풀었다. 박 의원은 ▲법원 측이 도의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실수 발생 배경과 피해 구제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감사 착수 또는 징계를 하

지 않은 점을 지적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치 과정을 물었다. 이에 박병철 광주지법원장은 “전자 소송이다. 당시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압류 취해서 목록이 사라졌다. 법원 공무원의 실수임은 분명하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은 “감사실에서 1차 검토를 했다. 최근에 (징계 요청 내용 증명을 보낸)민원인에게 서면 답변을 통해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황 고법원장은 “다만, 공무원 개인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이 책임지기에

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고, 법원 조직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거 같다. 가압류 사건이다 보니 손해액이 특정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정리해 청구하면 대응하는 방법과 다른(구제)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과 전반적인 체계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광주고법·지법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거나,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서야 실수를 인정해 폐쇄적·권위적 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